



농림부

2006년도 농림예산 국회 심의 · 조정 결과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림예산은 쌀협상비준 후속대책,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추가소요, 폭설 피해 복구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추가소요 등으로 총 1조735억원이 증액 조정됨에 따라 2006년 농림예산순계 규모는 9조653억원으로 정부안 8조8천821억보다 1,832억원 순증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 1조735억원은 농림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총당 3,903억원, 외부조달 6,832억원(예산순증 1,832, 공자기금 차입 5,000)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 119조 투융자 규모도 당초계획 10.3조원 보다 0.8조원이 늘어난 11.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 농업 · 농촌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축발기금 대출기관 완전 개방

농림부는 일반 시중은행도 축산발전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시중은행이 축발기금의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와 '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축발기금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액의 1.5%를 취급수수료로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관련은행들에게 1월 3일자로 통보했으며, 보다 많은 시중은행이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축발기금을 취급하도록 오는 1월 12일(목)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완전개방 조치에 따라 축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업체는 농협 이외에 농협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 관리기관을 농협에서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책자금 수요자가 주거래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참조〉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2005 예산	2006 예산안			비고
		정부안	국회증감	계	
· 축산발전기금	7,064	6,758	△ 27	6,731	
〈증액〉 (여유자금)	(2,246)	(2,326)	(27)	(2,353)	사업비 감액으로 여유자금 증가
〈감액〉 송아지생산안정사업	60	57	△ 27	30	집행전망 감안 감액조정

※ () 는 일반지출에서 제외되는 여유자금임.

을 지원받을 경우 그동안 정책자금 금리 이외에 대출취급기관에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근저당 설정 비용 등 대출금의 약 1.0%~1.5% 수준)의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

농림부는 대출금 규모가 큰 사료·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농협에서 주거래은행으로의 대출기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축산농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농협(지역축협)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고 가축사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기관 변경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부는 가축계열화사업, LPC 경영안정자금 등 축발기금 일부 사업에 한하여 일반은행도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부분개방을 2004년 8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자금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하반기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 결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지난해 12월 28일 '2005년도 하반기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 사업은 농림부가 지난해 7월 29자로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이 되어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위원회(20명) 및 실무 평가단(31명)을 구성, 도축장별로 현지실사를 통해 HACCP운용수준평가를 실시하여 2005년도 상반기 도축장 HACCP수준평가결과발표에 이어 상급·중급으로 구분 발표한 것이다.

■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

쌀 협상, FTA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월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림부는 '2006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세부시행지침'을 29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 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외는 3년간(금리 5%) 분할 상환하게 된다.

〈상위 등급 도계장 : 13개소〉

도계장명(가나다순)	도계장 소재지	대표자명
농협 목우촌 계육가공공장 (주)동우	충북 음성	임철교
(주)디एम푸드	전북 군산	정창영
(주)마니커 동두천	경기 용인	이종진
성화식품(주)	경기 동두천	한형석
(주)신명	충남 천안	이승준
정우식품(주)	전북 정읍	이재철
(주)청정계	경기 포천	이한칠
(주)하림 씨엔에프	경기 양주	장세평
(주)하림	경북 상주	이동영
한강CM(주)	전북 익산	김홍국
(주)해마로식품	경기 화성	홍응수
(주)흥인농산	충남 부여	엄종인
	충남 당진	김종석
계 13개소		

〈중위 등급 도계장 : 12개소〉

도계장명(가나다순)	도계장 소재지	대표자명
(주)상원	전북 익산	유상원
(주)우림인티그레이션	전북 김제	이재응
(주)유성하이치킨	광주시	김재환
(주)육성	충남 보령	오배근
(주)체리부로	충북 진천	김인식
(주)플러스푸드	경기 김포	심재국
하나식품(주)	충남 공주	김선홍
한라 육계영농조합	제주시	백영중
한려식품(주)	경남 거제	전복동
(주)해담은 세상	경기 화성	박종선
(주)현진	강원 춘천	주영노
(주)화인코리아	전남 나주	나원주
계 12개소		

둘째,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셋째, 2001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넷째, 이번 대책은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예·적금(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예·적금 잔액)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06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2007년중 만기도래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6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05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결과

농림부는 2005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결과, 한육우는 소값 불안에 따른 출하 증가로 지난 9월보다 0.3% 감소한 1,819천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작년 12월보다는 9.2% 증가한 수치다.

젖소는 원유생산 쿼터제 시행, 저능력우 도태 등으로 지난 9월보다 6천두(1.2%), 작년 12월보다

18천두(3.6%) 감소한 479천두로 조사되었다.

돼지는 연말 수요기대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지난 9월보다 31천두(0.3%) 감소한 8,962천두로, 작년 12월보다는 54천두(0.6%) 증가했다.

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 및 가격 하락으로 병아리 입식이 줄어 지난 9월보다 14.0% 감소한 109,628천수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작년 12월보다는 2.7% 증가했다. 육계의 경우 50,422천수로 전분기보다 23.4% 감소,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4만5천호 모두 등록

농림부는 일정규모 이상인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하는 전국의 축산농가 45,323호가 법정기한인 2005년 12월 26일까지 모두 축산업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미만의 농가들도 5,740호가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하여 총 축산업 등록농가는 51,063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부화업 198호, 종축업 475호, 계란집하장 30호, 한육우 25,630호, 낙농 8,616호, 양돈 9,324호, 양계 6,205호, 오리 585호이며, 축종별 등록대상은 소 300㎡, 양돈 50㎡, 양계·오리 300㎡이다.

축산업등록제는 가축방역,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을 위한 제도로서 축산법 및 시행령을 개정(2003. 12)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대상 농가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모두 등록을 마친 것은 그 동안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축산농가가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농가들의 등록정보를 가축방역과 축산

물 안전관리 부문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축산업 등록제가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7년부터 실시예정인 '가축두당 사육시설 면적기준'도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농가주·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농림분야 신기술 연구개발비 522억원 지원

농림부는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서 농림기술개발사업을 개편하고, 2006년 BT 실용화기술 등 신기술분야에 522억원을 지원한다.

2006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은 3가지 세부사업을 통해 신규과제와 지정공모과제 연구팀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및 농산업기술개발사업은 자유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농산업기술개발사업의 행정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조정을 통하여 민간 개인육종가의 신품종개발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과제 또는 연구팀 공모는 1월 9일부터~16

일까지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에서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과제는 비밀·공개평가 등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연구과제는 3~5년에 걸쳐 과제당 5~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 문의 : (02)2041-7511~3

호남폭설피해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

특별위로금·주택복구비 등 지원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29일 연이은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북 호남지역을 비롯 전국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를 12월 29일자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행정부 관계자는 "총 피해액이 3,641억8,0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1개 시·도에 3,000억원)에 못 미치지만 폭설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했고,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당했으며, 계속 피해액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주민들은 특별위로금,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피해 복구비용을 일반재해지역보다 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지방자치단체도 국고 지원금을 일반재해지역보다 20~30% 더 받을 수 있다.

특별위로금으로는 주택 전파 500만원·반파 290만원, 농작물 농림수산물 80% 이상 피해 농·어가의 이재민에게 500만원, 50~80% 미만 피해 농·어가의 이재민에게 30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용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특별재해지역

- 광주 : 동·서·남·북·광산구
- 강원 : 강릉
- 충남 :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당진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전남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경북 : 포항, 영덕, 울진
- 경남 : 통영, 김해, 밀양
- 제주 :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 특별재해지역 지원범위

- ①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 200만원~500만원
 - 주택 전파(동당) : 500만원
 - 주택 반파(동당) : 290만원
 - 침수주택(세대별) : 200만원
 -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 80%이상 피해농·어가 이재민 : 500만원
 - 50%~80%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 300만원
- ② 주택, 농작물 대파대 및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 주택피해

(단위 : 천원)

항 목	단 위	현행기준	특별재난지역	비 고
주택전파	동	30,000	36,000	15평기준 →
주택반파	동	15,000	18,000	18평기준 상향

- ③ 사유시설 자부담분 보조전환 : 자부담분은 15%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전환
 - 축사 : 현행 35% 보조지원→45% 보조지원으로 확대
 - 가축·누에입식 : 현행 50% 보조지원 → 60% 보조지원으로 확대
- 세제상 특별지원
 - 금융상 : 자금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특례보증 등
 - 세제상 : 조세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임을 증명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

했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본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은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인정기구가 규정된 절차(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의 규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승인된 시험소 인정기구인 기술표준원(KOLAS)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의 동물용의약품, 다이옥신, 중금속, 농약 분석 분야와 축산물규격과의 미생물, 이화학, 방사능 분석 분야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축산물의 잔류물질 및 성분규격 시험에 있어서 국제수준(ISO/IEC 17025)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축산물 안전성 시험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아시아지역 국제 표준 실험실로서 중추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인정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품질시스템의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을 실시할 것이며, 각 해

당 분야 실험실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감사와 내부 감사를 받도록 하여 내실화할 것이다.

■ 첨단 IT 기술 가축방역 분야에 활용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 가축방역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가축전염병

예찰이 가능한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되어 가축 방역분야에서도 첨단 IT 기술이 접목되게 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전국 45 개 시·도방역기관의 방역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현장예찰용 PDA 사용법에 대한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발한 현장예찰용 PDA는 방역담당자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입력한 각종 질병 예찰정보가 무선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역기관에 송수신되기 때문에 방역기관에서는 전염병의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방역관은 해당 지역이나 농가의 질병관련 정보와 지리적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분석이 가능하므로 질병 예찰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여 가축 방역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2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가축 전염병 예찰용 PDA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몽골 중앙수의검사소와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몽골 울람바타르에서 몽골 중앙수의검사소(Sodnomdarjaa 소장)와 기술정보 교환, 연구인력 교류 등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은 몽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몽골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성 질병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집된 질병발생 정보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에서 실험하지 못하는 해외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번 몽골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야외현장 실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연구소

■ 가금종합연구단지 조성기념 제막식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그동안 가금연구의 산실이었던 대전 계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축산자원개발부(성환)에 가금종합연구단지를 조성,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해 12월 21일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총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진행됐으며, 부지면적 10ha(30,000평)에 연구용 계사 26동(10,110㎡, 3,058평)과 부속시설인 친환경 계사, 계분처리장, 방역시설 등 7동(2,481㎡, 750평)과 원활한 연구사업 환경을 조성코자 가금 종합연구동(2,957㎡ 895평)이 건립되었다.

이날 윤상기 축산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상의 연구시설을 갖추게 된 가금종합연구단지 조성을 계기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수준의 최고라는 자긍심과 함께 무한 경쟁의 축산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책대안과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한 가금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유전자원 관리 자문위원회의 개최



축산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전북 남원소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축산업계, 대학교수 및 축산관련학회 대표 등 15명을 초청, 제4차 동물유전자원관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동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쟁점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장 김영근)이 준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안) 4건과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계획(안)을 검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식물에 비해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 동물유전자원의 관리체계를 비교적

단시간 내에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이 체계가 빨리 정착되어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동물유전자원관리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동물유전자원에 관한 최고 자문기구로서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세계식량기구가 요구한 동물유전자원 현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했고, 동물유전자원의 국가관리체계 구축방향 및 국가관리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동물유전자원관리에 관한 정책입안 및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상호 신임 본부장 취임



지난 12월 21일자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신임 본부장에 최상호(63)씨가 취임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해 12월 9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최상호씨를 복수후보자 중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최상호 신임 본부장은 지난 31년동안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에서 가축질병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축산업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농촌진흥청에서 6년 동안 연구관리, 예산, 조직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며, 25년간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에서 기생충과, 병리진단과, 해외전염병과 과장과 축산물 검사부, 질병연구부 부장을 역임하면서 국가 방역 정책 사업에 적극 동참했다.

1998년에는 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으로 근무하

면서 국가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도축장, 축산물 가공공장의 HACCP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방역본부장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무식 갖고 힘차게 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1월 2일 태동관 다산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농촌에는 희망을, 연구원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 해가 되길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올해도 DDA 협상과 FTA 협상 등 국내외 농업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문을 열어 “앞으로 농정의 신뢰가 회복되어 농업인과 연구원, 공무원, 도시민이 상생의 대안을 찾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연말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경영목표 중 비전을 ‘도농상생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정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소를 제거하여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희망을 전해주고, 연구원을 더욱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월 25일 서울 잠실 소재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세계 속의 한국 농촌’이란 주제 하에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를 전일대회로 개최한다.

이번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는 총 4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농업협상과 농가경제 전망 세션으로 ‘DDA, FTA 동향과 전망’, ‘농업·농가경제 전망’, ‘농정운영방향’이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정책 세션으로 ‘농업구조의 변화 동향과 정책과제’, ‘직접지불 정책의 방향과 과제’, ‘고령사회의 농촌복지정책 방향’이 발표되며, 제3부는 동북아교역, 식품안전성, 농촌과 환경 세션으로 나눠 열린다. 제4부 산업별 전망과 과제 세션에서는 쌀과 축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조사료의 수급 전망과 과제가 발표된다.

농협중앙회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최근 전남, 전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폭설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대상자에 따라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시 대출금리는 정상대출 금리보다 0.5%~0.75% 인하 적용한다.

기존대출 고객에게는 특별히 대출금상환기간 연장, 기한연장시 대출금리 0.5% 인하, 이자 및 할부상환금의 납입 6개월간 유예 등의 지원을 해준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여신

관련 각종 수수료의 납입도 면제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에 대하여 동일인당 보증한도 3억원이 내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하고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피해농가의 부담 경감을 돕는다. 또한 농협보험인 공제의 경우도 공제로 납입기간을 6개월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도 면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를 도울 예정이다.

농협관계자는 “지원대책이 전 계통사무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의 경우도 피해농가에 대해 최우선으로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기한연기 또는 재대출을 통해 피해농가의 자금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며, 이자납입을 6개월 유예하고 대출관련 수수료 및 설정비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올해 예산 68억원, 18억원 증액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올해 사업의 초점을 소비홍보에 집중기로 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농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해 58억


원보다 18억원이 많은 68억원의 2006년 사업예산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양계·오리 등 가금류 농가의 어려움이 큰 데다 올해도 기온이 떨어지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파동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조류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며 소비와 맞물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예산중 가장 높은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비홍보와 관련 김정주 건국대 교수는 대량급식처의 메뉴를 정하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영재 한국양계조합장은 3년 동안 가금류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수급안정위의 사업내용은 별로 바뀐 게 없다면서 생산과 소비연구와 별도로 가공품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가금류의 소비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홍보를 제외한 내년 위원회의 사업은 생산조절사업 22억, 수출입사업 6억, 조사연구사업 3억3500만원, 운영·예비비 4억2300만원으로 책정됐다. 

〈HACCP 작업장(사료) 인증 획득〉

업체명	적용품목	지정일	소재지
(주)선진 이천공장	고기소, 젓소, 돼지, 닭	2005.12.27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114-1
(주)우성사료 경산공장	고기소, 젓소, 돼지, 닭, 개, 어류용, 기타	2005.12.27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50
CJ(주) 군산공장	고기소, 젓소, 돼지, 닭, 기타	2005.12.27	전북 군산시 소룡동 43
광주광역시축산협동조합 목포배합사료공장	고기소, 젓소, 돼지, 닭, 개, 기타	2005.12.27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714-2